

Vol. 09

2022.09.14.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권경아선임 kakwon@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조세심판사례

III.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등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통이력 대상물품 조정 (고시 별표1)	1. 대상물품 (기존)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맨홀뚜껑 (현행) <u>에이치(H)형강, 플랜지(Flange), 맨홀뚜껑</u> 2. 지정기간 : 2022.8.1. ~ 2024.7.31.
주된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 (제8조의2 제4항)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 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 리 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3) 시행일

’22.8.1.

I. 법령 개정사항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소분류 품목 신설, 품목명 및 품목설명 변경 등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의료기기 품목 신설 (별표)	소분류 품목 4개 신설 (1) A16180.23 비침습적무통증신호장치 (2) A16180.24 말초혈관자극기 (3) A78010.08 고막접촉보청기 (4) B07150.02 개인용유훈혈제
의료기기 품목명 및 정의 변경 (별표)	소분류 품목 6개의 품목명 및 정의 변경 (1) A83020.01 개인용전위발생기 (2) B04140.01 단초점인공수정체 (3) B04140.02 다초점인공수정체 (4) B04140.03 난시교정인공수정체 (5) B04140.04 유수정체인공수정체 (6) B04140.05 조절성인공수정체

(3) 시행일

'22.8.2.

I. 법령 개정사항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 효력 상실 등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전확인 및 변경신고 수리 규정 신설 (제22조제2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근거 신설 (제24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위탁기관 추가 등 (제37조)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시행일

‘22.8.4.

I. 법령 개정사항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기준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제조업자명·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근거 신설 (제39조의 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및 통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별표 10)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기준을 정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시 인증 취소 등의 위반행위, 처분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시행일

'22.8.4.

I. 법령 개정사항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제2조 3항)	제1항에 따른 세율*은 (중략)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휘발유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리터당 세율

(3) 시행일

‘22.8.12.

I. 법령 개정사항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제1조 7항)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중략)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부탄, 천연가스, 부산물 유류, 유연탄 리터/킬로그램당 세율

(3) 시행일

‘22.8.12.

II. 조세심판사례

1.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영주권 보유자로 00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AAA 상표 팔찌 등 물품원가 미화 000불 상당 000점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을 발견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체류기간 중 일시 사용 후 출국시 반출할 물품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요청하자 출국시 재반출을 조건으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이하 “일시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관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면제함.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국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함.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 9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1 조 제 1 항 제 3 호의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국일까지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대품 통관고시 제 63 조 제 1 항에 따라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반출확인 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반출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확인 없이 출국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결정일

2022.07.14. (조심 2022 관 0014)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한-베트남 FTA HS 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22.8.1.일자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 기준연도가 HS2012 에서 HS2017 로 변환되어 한-베트남 FTA 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관세청은 PSR의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22.10.31.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변경신고 방법
인증재심사 대상 HS	관할세관장에게 <u>인증사항 변경신고서</u> , <u>원산지소명서</u> 및 <u>원산지증빙서류</u> 제출. 또는 인증만료일 1년 이내로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심사 신청.
변경신고 대상 HS	관할세관장에게 <u>인증사항 변경신고서</u> 제출.

※ 대상 HS 확인 방법: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 첨부 엑셀파일 참조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66358>)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22.8.1.부터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HS2017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는 HS2017 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총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발급 요망.